

# 보수주의자들의 저술에서 박정희는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 모순적 프레이밍의 정치동학과 박정희

구현우 | 부산대학교

## | 국문요약 |

한국에서 보수주의의 정치적 기원은 모순적인 면이 있다. 보수주의자들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와 별로 관련이 없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그 기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정희의 경우 이러한 모순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보수주의자들은 박정희를 그들의 이념 체계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정희는 '선별적 유인'과 같은 시장 기제를 통해 경제주체들에게 동기를 부여했으며, '실용주의'의 정치를 몸소 실천하여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를 자신들의 이념 체계 내로 편입시키려는 보수주의자들의 노력은 필연적으로 '프레이밍(framing)'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 시대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 결과 보수주의자들의 노력은 또 다른 모순을 낳는다. 박정희를 정치적 기원으로 삼은 이상,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 충만한 '관념적인 우파의 나라'가 아니라 철 지난 냉전 논리가 지배하는 '반공국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제어 | 박정희, 보수주의, 프레이밍, 부국의 정치지도자

## 1. 서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며, 한국에서 보수 세력을 대변한다는 제1야당의 회의실에는 세 명의 정치 지도자의 사진이 걸려 있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이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이 당이 표방하는 정당 이념을 생각한다면, 김영삼은 차치하고서라도 이승만과 박정희의 사진은 걸려 있으면 안 된다. 정치 논리를 배제한 채 이성과 상식에 근거한다면 그렇다는 말이다. 아마 이 당에 걸려 있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사진은 한국 보수 세력들이 현대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순된 인식의 한 단면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조금 과장되게 말한다면, 보수주의자들은 현재의 정치경제 현상의 기원을 모두 박정희 시대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의 풍요로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체제도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와 연결시키려는 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함의를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치열하게’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자 및 시장주의자로 변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의 ‘박정희 만들기’의 역사적 과업은 현실정치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그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 그들 스스로 말했듯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좌파들이 폄하한 박정희의 진면목을 대중들에게 알림으로써 박정희, 더 나아가 박근혜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들이 봤을 때 박근혜는 소수 불순분자들이 선동한 중우정치의 ‘희생양’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편향된 역사 서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보수주의자들은 심리학자들이 말한 ‘프레이밍(framing)’이라는 과정을 거쳐 박정희 시대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프레이밍이란 “인지된 현실의 일부만을 선택하여 그것을 보다 현시적이거나 가치적으로 만드는 일련의 과

정”을 의미하는데(Stone 2012, 253),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어떤 역사적 사실들은 역사가에 의해 쉽게 받아들여지는 반면 다른 사실들은 수정되거나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

그렇다면 ‘프레이밍’의 과정을 통해 박제화된 박정희의 모습이 현재의 정치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글은 이러한 물음에 대해 하나의 답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보수주의자들<sup>1)</sup>의 저술<sup>2)</sup>에서 형상화된 박정희의 모습을 살펴본 다음, 그것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역사는 과거의 정치이고 정치는 현재의 역사’라는 잘 알려진 경구에 의한다면, 보수주의자들이 형상화한 박정희는 분명 역사적으로 죽은 인물이 아닌 현재 살아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행형의 정치’야말로 보수주의자들이 생물학적으로 죽은 박정희를 역사적으로 살리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 
- 1) 여기서 말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정치적’ 보수주의자들에 한정되며, 보수주의의 이념에 적합한 ‘합리적’ 보수주의자들도 많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진보주의자들도 그렇겠지만, 보수주의자들 역시 단일의 이념적 카테고리 내에 포섭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파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정치적’ 보수주의자들의 저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념이 현실 정치에서 점하는 위치 때문이다. 이념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이 결집하여 이를 토대로 정치적 선택을 하는 이념의 ‘양극화(polarization)’ 시대에 보수주의나 진보주의와 같은 이념은 더 이상 학문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현실 정치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보수주의자들이 그들의 이념 지평을 넓히기 위해 사용하는 정치 전략의 모순을 이해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2) 보수주의자들이 쓴 박정희 관련 저술은 방대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부득이하게 선별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선별 작업은 몇 가지 기준에 근거했는데, 우선 최근 저술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역사는 과거의 정치이고, 정치는 현재의 역사’라는 경구(警句)에 의한다면, 최근 저술일수록 보수주의자들의 정치적 지향이 더 잘 드러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저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박정희의 삶을 다채롭게 묘사한 전기류의 저술은 포함시켰다.

## II.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박정희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다. 박정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박정희 시대 양적인 성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 다만, 그 정치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펴나가려고 한다. 대표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박정희 시대 경제 성장이 시장 논리의 결과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분명 박정희를 그들이 선호하는 시장주의 이데올로기 내에 포섭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 1. 박정희 경제학

입버릇처럼 ‘시장’을 얘기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 ‘관치경제’의 대명사인 박정희를 변론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또 다른 정신적 지주로 삼는 이승만은 고마운 존재일 것이다.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에 익숙한 이승만은 경제계획에 대해 ‘스탈린식 사고방식’이라고 질책하는 등 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 접점을 찾기 쉽기 때문이다(이기홍 1999, 265). 그렇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논리 중 중요한 한 가지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 좌승희 같은 보수주의 경제학자가 이 문제에 천착하면서, 박정희를 ‘시장주의자’로 변모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산업화 전략이 자신들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간과한 채, 박정희 정권이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 정치 논리를 배제했다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아마도 보수주의자들은 선거 정치로 정치를 좁게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정치의 빈자리에 경제 논리를 주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좌승희(2015; 2018)가 말

한 “박정희 경제학”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선별적 유인(selective incentives)’의 제도화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박정희 정부는 달러 표시 수출액과 같은 정치적으로 조작이 곤란한 성과에 근거하여 차별적으로 지원을 했으며, 이것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그는 보고 있다. 따라서 좌승희에게 있어 박정희 시대 산업화의 본질은 ‘관치차별화’에 있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박정희 정부는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추구하였지만, 미시적으로는 경제 성과에 근거한 선별적 유인을 제도화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정부는 경제제도(경기규칙, 유인구조)와 정책을 ‘스스로 도와 성공하는 국민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 모두를 스스로 돕는 자로 변신시킬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좋은 성과를 우대 격려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제발전의 동기를 부여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의 경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경제적 차별화 원리에 따라 기업 육성 전략을 창의적으로 추진하여, 짧은 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중화학공업을 일으켰다(좌승희 2018, 111).

그리고 이러한 ‘정치의 경제화’가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그는 단언한다. ‘경제적 차별화 정책’이 경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정치 논리가 개입될 여지를 없애 정치에 의해 경제가 왜곡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이는 또한 대중영합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와 같이 경제정책 결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는 전략을 오래전에 필자는 ‘**정치의 경제화**’라 명명한 바 있다. … 박정희 대통령의 권

위주의적 리더십이 비판받고 있으나, 바로 이것이 경제적 차별화 정책의 정치적 왜곡을 막는 데 기여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높은 성과에 더 많은 보상’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차별화 원리를 ‘낮은 성과에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평등주의적 포퓰리즘 정치로부터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박정희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정치의 경제화를 통한 경제적 차별화 정책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강조는 원전, 좌승희 2018, 112-113).

차별적 지원체계를 통해 경제주체들에게 발전의 정신을 함양하는 ‘정치의 경제화’가 경제 성장의 ‘필요조건’이라면, 그 차별화 기능을 잃어버린 ‘경제의 정치화’는 경제 정체의 ‘충분조건’이다. 정치와 경제는 다른 조직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데, ‘1인 1표(one man one vote)’라는 정치의 형식논리가 차별화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좌승희에게 있어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정체 상태에 빠진 것은, 박정희의 차별화 정신은 망각한 채 ‘경제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경제적 평등의 추구 때문이다.

선별적 유인을 제도화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새마을 운동을 들 수 있다.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는 관 주도의 농촌 근대화 운동으로 비판받기도 하지만,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큼 박정희의 경제철학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윤주진(2017)의 글은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는 새마을 운동을 “자발성과 경쟁심리의 공학적 결합”이라고 단언한다. 근면·자조 정신을 체화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 지원을 하여 발전을 위한 집합적 노력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른 선별적 지원보다는 정책의 과실(果實)을 분산시키는 ‘정치적 분산(political dispersion)’을 선호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Swanstrom 1988), 이러한 새마을 운동의 성격이 좋게 비춰지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새마

을 운동에 반발했고, 정치논리에 사로잡힌 이러한 정치인들의 반발과 그와 대비되는 박정희의 확고한 정책 의지는 시장의 원칙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좋은 논거가 될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의 ‘탈정치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찬양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 그렇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무차별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박정희는 “정권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차별 지원을 해야 한다”며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다(윤주진 2017, 255).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 ‘관치경제’의 대명사인 박정희를 변호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 박정희와 시장경제를 연결시키는 일에 많은 공을 들여왔으며, 그것의 결과물이 박정희 정부가 선별적 유인과 같은 시장 기제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동기를 부여시켰다는 이른바 “박정희 경제학”이다. “정부 주도로 시장경제를 만들(었)다”는 현진권(2018)의 말은 이러한 박정희 경제학에 대한 적절한 요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된다. 한 예로 김형욱은 미 의회에서 박정희가 기업들에게 가혹한 압력과 제재를 가한 것은 많은 부분 ‘조작’의 결과물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Kang 2006, 120에서 재인용). 물론 이는 말 그대로 ‘토사구팽(兎死狗烹)’된 김형욱의 증언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중립적일 수 있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하버드 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박정희의 사후에 실시한 공동 연구의 결론도 박정희 정부가 투자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앨리스 엠스덴 2005). 게다가 박정희 정부와 같은 발전국가 체제에서 선별적 유인과 같은 경제 논리가 철저히 관철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성과 상식에 어긋난다. 박정희 정부가 내세운 경제 성장이 바로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루어진 ‘산업화 정치(industrialization politics)’를 의미하기 때문이다(임혁백 2004; 2005; 2014).

## 2. 낙수효과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라는 말이 있다. 이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기업을 살리면 정부도 국민도 모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것이다. 하라리(Harari 2014, 조현욱 역 2015)는 그의 책 『사피엔스(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에서 낙수효과를 믿는 것은 산타클로스를 믿는 것만큼이나 ‘순진하다’고 평한 바 있지만, 보수주의자들은 그러한 순진한 생각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의 가치가 일상화되어버린 현시점에서 낙수효과만큼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헤게모니’ 용어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향적(top down)’ 자원 이동에서는 대기업이 빠질 수 없다. 사실 보수주의자들은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 성장에서 대기업이 수행한 역할을 줄곧 강조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경유착(政經癒着)’이라는 말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이 말은 국가와 자본 사이의 복잡한 이야기를 단순히 병리 현상으로 치부해버려, 한국의 경제 성장과 그 과정에서 수행한 대기업의 역할을 폄하하려는 ‘불순환’ 의도에서 나온 상식적인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이 봤을 때 한국의 대기업은 그들의 노력에 상응한 보상을 받은 ‘능력주의(meritocracy)’의 상징적 대상이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하에서 대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했다라도, 거기에는 ‘도덕적 정당성’이 부여된다. “근면성에서 비롯된 불평등은 무고하다(마코비츠 2020, 79)”는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영훈(2017)이 말한 ‘적하(滴下)식 공업화’는 바로 이러한 보수주의자들의 역사관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영훈은 우선 1960년대부터 박정희 정부에 의해 추진되기 시작한 수출지향적 공업화의 성격에 주목하는데, 여기서는 “국제적 규모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의 경제개발은 그 역사적 당위성이 인정된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



제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대중경제론’은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무지의 소산일 뿐이다.

박정희 모델을 비판한 대중경제론은 자국의 농업과 자원에 바탕을 둔 중소기업의 육성을 주장했지만, 중소기업의 전통이 빈약한 자국의 경제사를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한 제약조건에서 정부가 제한된 자원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을 지원했다라면 시장적,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자원의 낭비가 심한 가운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박정희 모델이 소수 대기업의 발전을 우선 지원한 것은 자국의 역사적 제약조건에 비추어 정당한 선택이었다(이영훈 2017, 21).

그러나 박정희가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경제 논리가 관철되기 어려웠다. 여기에 보수주의자들의 역사인식을 엿볼 수 있는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박정희의 공로로만 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훈에게 있어 박정희 모델의 해체는 곧 한국 경제의 정체로 이어질 뿐이다. 김영삼 정부의 OECD에의 ‘성급한’ 가입은 97년 외환위기라는 재앙으로 이어졌으며, 외환위기 이후 경제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행해진 기업 규제는 대기업의 자율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성장의 정체와 청년 실업,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요컨대, 보수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대기업 중심의 적하식 공업화가 흔히 말하는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다. 김광동(2017)이 “우리만 모르는 대한민국”이라고 평했던 한국의 경제 기적은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한국이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그것이 박정희의 공로만은 아닐 것임도 자명하다. 박명림(2006)이 말했듯이, 박정희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한국은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박정희 시대와 비슷한 경제성장을 구가했다. 게다가 보수주의자들은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

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동과 같은 보수주의자는 ‘헬조선’이라며 “기적을 한탄하는”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편중된 산업화는 목표 수행 면에서는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심각한 분배 문제가 제기되는 등 체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현실 정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기 때문이다.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성장과 분배는 ‘상충관계(trade off)’에 있지 않을 수 있다. 폰투스손(Pontusson 2005)에 따르면, 성장지향적 국가들(영미계 국가)과 분배지향적 국가들(북유럽 국가) 사이에 성장률 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보수주의자들이 성장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내린다면, 이는 보수주의자들이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동기에서이다. 그들에게 있어 박정희 정권이 재벌 중심 경제체제를 운영한 것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재벌중심 경제체제로 말미암아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복지정책은 경제성장”이라는 그들의 주장처럼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수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 하의 한국이 자본가 계급의 ‘천국’이었다는 일각의 평가(Koo 2001, 신광영 역 2002)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내린 결론이다.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로 말미암아 한국에서 ‘중산층’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류석춘 2017; 2018).<sup>3)</sup>

### 3. 네트워크 이론

‘기업주도론’이라는 것이 있다. 발전국가론과 같은 국가중심론과 달리, 기업주

---

3) 류석춘이 각종 통계수치에 근거하여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주장은 역사학자 헨리(Henry 2014, 김백영 외 공역 2020)가 말한 ‘계량적 합리성의 오류’에 빠진 면이 있다. 점증하는 상대적 빈곤율과 물가와 지가의 앙등, 그리고 극도로 억압적인 유신체제라는 정치적 변수까지 고려한다면 단순히 통계수치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박정희 정권의 노동정책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론에서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많은 부분 자본가 계급의 창의적인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발로였다라는 것이다. 김인영(1998a; 1998b)과 같은 보수 성향의 학자들과 전경련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러한 주장은, 발전국가론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과 같은 한국사회의 ‘상식적인’ 용어에 대해서도 강한 반감을 드러낸다. 정경유착이 함의하는 바와 달리, 한국의 자본가들은 정치권력에 기생하여 그들과 공생관계를 형성하려고 한 ‘정치적 자본가’가 아닌 설비 투자나 기술 혁신에 의존하는 슈페터가 말한 ‘합리적 자본가’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지지하는 기업주도론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기업들의 공로로 돌림으로써, 그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박정희의 ‘위대함’과는 거리가 먼 결론에 도달하는 모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업주도론을 신봉한 김인영(2017)은 최근에 박정희의 위대함이라는 일반적 논의의 틀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이른바 ‘네트워크 이론’이다. 국가와 자본의 지배연합의 본질은 ‘유착’이 아니라 ‘협력’이며, 이들이 협력했기 때문에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박정희의 산업화 업적을 폄훼하고자 하는 두 번째 프레이밍인 ‘대기업 특혜·정경유착’의 경우도 사실에 근거했다고 하기 어렵다. … 나아가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산업화를 성공으로 이끈 핵심은 정부-기업 협력관계인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외면하고 부정적인 개념의 ‘정경유착’으로만 정부-기업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박정희 산업화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하듯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공을 ‘정경유착’이라는 ‘부패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것과 같다(김인영 2017, 40-41).

김인영이 말한 정부-기업 네트워크의 핵심은 ‘분업의 원리’에 있다. 김광모(2015)가 “관계획-민실천”이라고 평했던 이러한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 국가는 직접 생산자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부패의 여지가 적었고, 또한 이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기존의 기업주도론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다만 ‘정부-기업의 협력 네트워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식으로 기존 주장을 수정하고 있다. 기존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박정희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러한 절충적인 입장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국가 주도에 의한 경제성장론이 간과하고 있는 요인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1960년대 말 이후 계속 수출에 의존해 왔다는 점이다. 수출주도형 한국경제 성장에 중요했던 것은 수입국들의 무역장벽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였고, 이 부분에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했다면 기업 주도이고,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중요했다면 정부-기업의 협력 네트워크에 의한 성장이 된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김인영 2017, 51).

결국 김인영에게 있어 ‘정경유착’은 좌파들이 만든 ‘네거티브 프레이밍(negative framing)’일 뿐이다. 정경유착은 박정희 시대 고도 성장을 꾀하려던 의도에서 나온 지극히 이념적인 용어라는 것이다. 본질은 ‘유착’이 아니라 ‘협력’에 있다고 그가 누차 강조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배연합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박정희 시대 이룩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요컨대, 김인영과 같은 보수 성향의 학자들은 박정희 정부 지배연합의 본질을 ‘협력’으로 보면서 이러한 협력관계가 제도화됨으로써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박정희 시대 지배연합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내린 결론이다. 박정희 정부 하에서 제도화된 정부-기업 관계가

경제적 교환관계를 매개로 하여 형성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계층적이고 종속적인 것이었다. 다시 말해,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정부와 기업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알라비(Alavi 1983)가 말한 ‘과대성장국가’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1950년대 국가와 삼백(三白) 자본가 사이에 형성된 지배연합은 남미의 경우와 같이 민주주의 체제와 연결되지 않은 ‘지대추구적 분배연합’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만큼 외부의 충격에 취약했다. 그 결과 쿠데타로 인해 너무 쉽게 붕괴되었고, 이후 정부 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기득 이익의 분배를 요구할만한 힘이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 정경유착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박정희 정부의 지배연합이 ‘생산적’이었는지 또는 심지어 김인영이 말한 ‘네트워크’로서의 지배연합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 Ⅲ. 실용주의의 정치

박정희 시대 양적인 성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와 관련하여 박정희를 변호하는 것은,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가 아닌 그 ‘방식’에 집중하면 되는 문제였다. 하지만 정치는 그렇지 않다. 보수주의자들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박정희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정치와 관련하여 박정희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수단’의 문제가 아닌 ‘본질’의 문제에 접근해야만 한다. 여기서는 바로 그러한 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박정희가 정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실용주의적 관점이 중요하며, 보수주의자들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실용주의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박정희가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민주주의의 기원에 대한 주장이다.

## 1. 박정희에게 정치란?

박정희가 정치,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체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탈 정치’를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가 정치의 본질을 간파하고 그러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사실 박정희의 경우 정치를 체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전인권(2006)이 말했듯이 그는 ‘반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몰민주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옳을지 모른다. 박정희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원리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정희에게 있어 정치란 어떤 의미였을까? 박정희에게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메이지유신(明治維新)에서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개혁을 ‘관념’이 아닌 ‘실용’의 문제로 이해했다(베네딕트 2008, 105). 이러한 메이지유신의 지사들과 마찬가지로, 박정희에게 있어서도 정치는 그럴듯한 명분이나 이념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직결된 것이었다. 이는 『지도자도(指導者道)』에서 박정희가 민주주의에 대해 논평한 부분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그는 ‘형식’과 ‘실제’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권의 연원은 국민에게 있는 고로 국민의 권리는 침범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물론 혁명전에 있어서도 제도면에 있어서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내걸고 국민의 권리는 형식적으로 보장되도록 되어 있기는 했다. 그러나 실지로는 주권은 일부 특권층에 있었고 국민의 권리는 그들에게만 있었지 일반국민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없었다. ... 국가가 파멸에 직면하고 국민의 주권이 비참히 유린되었을 때 여기에 일대 수술을 가하여 국가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소생시키고자 한 것이 이번 군사혁명이다. ...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을 받고 국가가 파멸하는 순간에 처해 있을

때, … 국가와 민족의 수난을 피하기 위해 취해진 행위는 정당한 것이다(박정희 2017a[1961], 25-27).

위 인용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박정희에게 있어 기성 정치는 국민 생활과 유리된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다. 박정희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그동안의 정치는 “특권층의 전매특허적 완상물(玩賞物)”에 불과했던 것이다(박정희 2017c[1963], 281). 물론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러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경험의 소산은 아니었다. 박정희가 정치에 대해 내린 결론은 한국사에 대해 그가 가지고 있던 관념의 결과물이었다. 박정희에게 있어 한국사는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퇴영(退嬰)의 연속’일 뿐인데, 그 중심에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박정희 2017b[1962]).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는 정치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서 배제하는 ‘탈정치’야말로 국민 생활을 증진할 진정한 민주주의에 다름 아니었다. 그가 말한 ‘행정적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정치’와 ‘행정’의 분리라는 박정희식 권위주의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그가 말했듯이,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서구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 행정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왕의 부패를 일소하고 국민들의 자치능력을 강화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박정희 2017b[1962], 229).

박정희는 자신의 정치를 기성 정치와 다르다고 말했지만, 그 역시 엘리트주의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가 생각한 정치 역시 서민 대중에 착근한 ‘신세력층’이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박정희 2017c[1963], 150-152). 여기서 우리는 조희연(2010)이 말한 “결손 국가와 결손 국민”이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나 일본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근대적 국가와 근대적 국민이라 볼 수 없는 후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정상 국가와 정상 국민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박정희에게 있어 정치는 ‘관념’이 아닌 ‘실용’의 문제였다. 그가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의 고운 손”을 미워했던 것도 그 같은 이유에서이다(박정희 2017c[1963], 270-271). 그에게 있어 필요한 사람은 시집을 읽는 ‘관념론자’가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기능공’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박정희나 그를 추종하는 보수주의자들이 박정희의 정치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실용’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하는 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남정욱(2017)의 글은 박정희와 공명(共鳴)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정치관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박정희가 ‘혁명가’ 다음에 ‘경영자’의 길을 선택한 것을 ‘신의 한수’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정치를 ‘혼란’ 그 자체로 보는 박정희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남정욱도 만일 ‘혁명가’ 다음 단계가 ‘정치가’였다면 한국은 혼돈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갔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실 그의 글은 박정희의 초기 저작인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이나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정치적 수사로 버무린 주장들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책들에서 보이는 상호모순적인 내러티브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정욱도 인용하고 있는 박정희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조와 전체(공동체)에 대한 강조는 상호모순된다. 정치적 선전물(political propaganda)에 가까운 책에서 개인적 철학이 어떠한 자유와 같은 규범적 호소력을 가지는 정치 가치를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요컨대, 보수주의자들은 박정희의 정치에서 나타나는 실용주의적 성격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그러한 실용주의의 정치는 정치 논리를 배제한 채 경제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에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했다는 규범적 관점으로 승화된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박정희 정권의 ‘탈정치’가 ‘탈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보수주의자들이 박정희의 탈민주주의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박정희가 탈정치를 한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면 더욱 긍정의 여지는 없어진다. 진술한 바와 같이, 박정희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경험의 소산이 아니라 한국사에 대해 그가 가지고 있던 관념의 결과물인데, 박정희의 초기 저작에서 보여지는 한국사에 대



한 그의 인식은, 송철원(2020)이 말했듯이 한국사의 정체성과 타율성을 줄곧 강조한 식민사관의 ‘재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2. ‘반일(反日)’이 아니라 ‘극일(克日)’

박정희에게 있어 ‘친일’은 원죄와 같은 것이다. 그가 일본군 장교였었다는 사실은 평생 친일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김호진(2006)은 박정희의 일생을 콤플렉스로 점철된 삶으로 묘사한 바 있다.<sup>4)</sup> 그리고 한일국교정상화는 그러한 친일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권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반대진영에서는 한일국교정상화가 ‘굴욕적 외교’, ‘매국 외교’라며 이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박정희의 생각은 달랐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반일(反日)’은 일본을 이기는 ‘극일(克日)’이라는 것이다. 1964년 한일회담의 타결을 위해 박정희가 박태준을 밀사로 파견하면서 한 언급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는 한일수교와 관련해 정치자금수수의 흑막이 있느니 굴욕적이니 뭐니 해서 비판도 많고 반대도 격심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놈들에게서 밀가루나 얻어먹고 사는 게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냐. 나라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길밖에 없다는 것이 내 신념이다. 설사 굴욕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왜놈들에게 더 큰 굴욕을 받아가며 살아야 할 것이다. 나는 내 정치생명을 걸고 이 일을 추진할 생각이다(이도성 편 1995, 195).

---

4) 어린 시절의 상대적 박탈감이 그를 권력추구자로 만들었으며, 일본군 장교가 된 이후에는 ‘친일 콤플렉스’, 남로당에 가입한 이후에는 ‘좌익 콤플렉스’,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는 ‘쿠데타 콤플렉스’, 유신체제 수립 이후에는 ‘유신 콤플렉스’, 육영수 여사 사망 이후에는 ‘독신 콤플렉스’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는 박정희의 ‘실용적 민족주의’가, 사실은 그의 만주에서의 군 경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박정희가 이동원에게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패전 직후 일본군 장교들은 자신들이 절대 전쟁에서 지지 않았으며, 단지 경제력에서 졌을 뿐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력으로 미국과 다시 전쟁을 치를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박정희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이동원 1992, 63-64). 박정희에게 있어 이러한 ‘무서운’ 민족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은 다름 아닌 경제적 자립이었다.

당연하게도 보수주의자들은 박정희의 이러한 실용적 민족주의를 높이 평가하며, 심지어 박정희의 친일 행각에도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 그가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만주군 장교가 된 것은 당시의 풍조에 따른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여명(2017)에 따르면, 박정희가 군 생활을 한 만주국은 “아시아의 엘도라도”였기 때문에, 많은 식민지 청년 지식인들이 피식민지 국가 신민으로서의 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주로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따라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소시민이 ‘생계형’ 친일파가 되었다고 하여 그를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그녀의 결론이다.

암흑의 시대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씨개명을 했고 소시민으로서면 서기로 근무하기도 하고 경위로 근무하기도 했다. ... 평범한 우리 소시민들에게는 ‘백성을 군림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구한말의 이씨 왕조’에서 ‘한민족을 일본국 신민으로 만들고자 한 이웃 국가의 통치’로 지배세력이 바뀌었을 뿐이다. 민초는 그 바뀐 세상에 적응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며 질긴 목숨을 이어가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할머니였고 할아버지였다(여명 2017, 85).

이러한 맥락에서 보수주의자들은 한일국교정상화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들이 주장하는 논거는 박정희의 ‘실용적’ 민족주의 내지 ‘극일’ 민족주의를 되풀이하는 수준이다. 즉, 민족적 자존심을 내세워 ‘반일’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일본을 이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민족주의라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여명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한민족의 케케묵은 가난”을 극복하고 ‘조국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원수의 돈”도 필요했다는 논리이다(여명 2017, 80-81). 박정희는 한일국교정상화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인텔리들’을 명분에 사로잡혀 사리분별을 못하는 ‘철부지’로 비난한 바 있는데(조갑제 2009, 340-341), 이는 그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의 보수주의자들의 관점과 정확히 공명하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돈’이었다. 박정희가 권력을 잡고 난 후 국가 주도 산업화를 추진하였지만, 이에 필요한 자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박정희가 ‘제2의 이완용’이나 ‘미국의 용병’이라는 강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추진한 이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보수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한일국교정상화의 ‘불가피성’을 줄곧 강조한다(왕혜숙 2017, 291-293). 그렇기 때문에 한일국교정상화는 ‘명분’이 아닌 ‘실리’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는 박정희와 보수주의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이다.

박정희에게 있어 친일은 원죄와 같은 것이지만, 사실 그의 친일 행각은 과장된 면이 있다. 해방 당시 박정희는 만주군 중위였지만, 당시 국군 내에 일본군과 만주군 장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의 친일 행각은 대통령이 됨으로써 부각된 측면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의 선택이 소시민으로서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었다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면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정희의 친일 행각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여명이 말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소시민이 모두 박정희처럼 군인의 길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혈서까지 쓰면서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 3.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

박정희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념은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 즉,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 이후에나 생각할 수 있는 ‘보충적인’ 것이며, 한국의 현실에서 서구의 민주주의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식의 민주주의, 다시 말해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5). 보수주의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념 역시 이러한 박정희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를 경제성장 이후에나 생각할 수 있는 ‘사치품’ 정도로 보는 박정희나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통계상으로 본다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김일영(2005)이 『건국과 부국』의 에필로그에서 ‘보통선거권 획득 시의 1인당 소득’을 <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김일영 2005, 459). 여기서 더 나아가 김인영(2017)은 한국 현대사의 특수한 경험, 다시 말해 1960년의 4·19와 1980년의 ‘서울의 봄’은 실패로 끝난 반면, 1987년의 ‘6월 항쟁’은 성공한 이유를 중산층의 성장,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박정희의 경제 개발에서 찾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박정희의 ‘산업화’에 의한 경제성장으로 소위 ‘공순이, 공돌이’가 중산층이 되었고, 이러한 사회 근대화는 중산층으로 하여금 정치적 자유를 갈망하도록 작용했다. … 그러한 중산층의 숫자가 1960년에는 매우 적었고, 1980년에는 많아졌으며, 1987년에는 민주화를 이루고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장했다. … 물론 1987년의 민주화 세력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성공이 민주화 투사들의 목숨을 건 투쟁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왜 1960년 4·19가 성공적으로

5) ‘굴화위지(橘化爲枳)’의 고사성어를 차용하여, 박정희는 서구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탱자 민주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조갑제 2009, 288-291).

마무리되지 못하고 1980년의 ‘서울의 봄’이 민주주의 정착으로 완성하지 못한 채 1987년에야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을 이룩하게 되었는데 이는 ‘민주화 투쟁’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한다. 역사상 ‘배고프면서도 성공한 민주주의’를 가진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의미이다(김인영 2017, 38-40).

보수주의자들의 이 같은 논의는 박정희가 민주주의자였다는 어찌 보면 이성과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기 위해 세계사와 한국사의 경향성을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한 면이 강하다. 박정희가 민주주의자였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의 주관적 동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보수주의자들은 박정희를 민주주의자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의 이강호(2019)의 저술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 때 운동권에 몸담았던 이강호는 전향을 한 후 박정희가 ‘옳았다’고 단언한다. 지나친 명분론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우선 그는 한국 현대사에서 5.16과 10월 유신을 금기시하는 사조를 비판한다. ‘양시양비적 논평’에서 벗어나 어떤 인물 앞에 놓인 역사적 과제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5·16과 10월 유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고도 성장을 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으며, 그런 관점에서 그 역사적 당위성이 인정된다.

5·16과 10월 유신이 불가피했다는 이강호의 지적은 박정희의 ‘선의’를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독재자들이 아무런 명분 없이 독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독재자들이 내세우는 그럴듯한 명분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주관적 권력동기이다. 게다가 그는 지나치게 ‘결과론’에 의존하여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면이 있는데, 이는 결과만 좋다면 동기의 순수성은 의제(擬制)할 수 있다는 논의로 이어진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박정희의 10월유신은 정권교체의 보장이라는 민주정치적 형식적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을 가로막는 것임이 분명하다. … 하지만 어떤 정치인의 정치적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내면의 욕망을 근거로 단정한다면 곧바로 정반대의 강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박정희가 유신을 단행한 것은 조국 근대화에 대한 열정이라는 순수한 애국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한 평가는 결국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동기의 순수성이 실패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 정치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적 평가는 노선 자체의 객관적 검토와 그 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 박정희의 유신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이강호 2019, 119).

유신체제와 같은 극단적인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보수주의자들은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그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박정희에 대한 지지가 거의 무조건적임을 잘 알 수 있다. ‘관료적 권위주의(Bureaucratic Authoritarianism)’를 운운하기 이전에, 유신체제는 선거 정치의 불확실성을 없애 정치과정의 영원한 승자가 되려고 한 박정희의 주관적 권력동기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김영명 2013). 그럼에도 보수주의자들은 유신체제 수립의 객관적 조건의 탐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이 유신체제와 중화학공업화를 연결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김형아(2005)가 말했듯이, 박정희에게 있어 중화학공업화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자주국방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대안이었는데, 이러한 산업구조의 전면적 개편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재편이 필요했다는 주장이다(김광모 2015; 오원철 2006; 이강호 2019; 조갑제 2009).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시간적 선후관계를 오해한 면이 있다. 임혁백(2014)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중화학공업화는 유신을 유발한 원인이 아니라

유신체제의 경제적 결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임혁백2014, 537).

박정희 시대 이룩한 경제 성장 덕분에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했다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박정희가 민주주의에 ‘친화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박정희는 『지도자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지도자의 자질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지만(박정희 2017a[1961], 23-25), 이는 ‘정치적 수사(political rhetoric)’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져본 적도 없고, 전인권(2006)이 말했듯이 민주주의라는 정치 원리 자체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적 민주주의’는, 그가 측근의 손에 살해되지 않았어도 그의 시대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허구화된 ‘반사실적(counterfactual)’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시대가 용변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선(先)성장 후(後)민주주의’라는 박정희와 그를 추종하는 보수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1970년대 유신체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박정희 시대 경제 성장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 내지 ‘부산물’에 불과하다.

#### IV. 진행형의 정치

지금까지 보수주의자들의 저술에서 나타난 박정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그는 ‘부국의 정치 지도자’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을 궤변으로 몰아세울 수는 없는데, 그들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사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주장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서두에서 말한 ‘프레이밍’의 과정은 보수주의자들의 저술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박정희의 면모를 폭넓게 묘사하기보다는 일부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수주의자들이 이러한 ‘우파적 프

레이밍'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 1. 헤게모니의 맥락

저명한 역사학자 카(Carr 1987, 김택현 역 2015)는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에서 널리 인용되는 역사에 대한 유명한 정의를 내린 바 있다.

역사가와 역사의 사실은 서로에게 필수적이다. 자신의 사실을 가지지 못한 역사는 뿌리가 없는 쓸모없는 존재이다. 자신의 역사가 가지지 못한 사실은 죽은 것이며 무의미하다. 따라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대답은,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이다(카 2015, 46).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카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평가하고 재해석하는 현재의 역사가도 중요한 존재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사실을 현재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재해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중 하나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현재의 정치 투쟁에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정치 투쟁의 도구로서 역사는 그람시(Gramsci 1971, 이상훈 역 2006)가 말한 ‘헤게모니’의 문제로 집약된다. 헤게모니야말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람시는 노동자나 농민과 같은 기층대중이 파시스트 독재를 지지하는 역설적인 현상의 원인을 정통 맑시즘에서 간과한 ‘문화’라는 변수에서 찾았다. 즉,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동원하는 데에는 강압이나 경제력을 넘어서는 담론, 슬로건, 지적·도덕적 호소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이익은 특수한 것이 아



닌 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것이 된다.

헤게모니가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계급 이익을 사회 일반의 보편적 가치의 용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자유’는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헤게모니 용어였다(Moore 1966). 절대왕정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던 대중들에게 자유만큼 호소력이 있는 말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시민계급(부르주아)이 생각한 자유와 노동자·농민이 생각한 자유는 그 의미가 달랐다. 시민계급은 경제적 자유를 요구한 반면, 기층대중은 정치적 자유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둘은 자유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서 묘한 접점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진 자들이 헤게모니를 가질 수 없었다. 그들은 초창기부터 권위주의 국가와 결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일제 강점기에는 ‘제국주의의 주구(走狗)’로, 1950년대에는 ‘부정축재자’로, 그리고 박정희 시대 이후에는 ‘정경유착의 원흉’으로 간주되어 사회의 지탄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그들은 박정희라는 대중적인 인물을 내세워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얻으려고 했다. 1980년대 이후 가속화된 ‘정경분리’의 구호 속에서도, 정작 그들은 정경유착을 만든 장본인에게 의탁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던 것이다.

가진 자들이 정당성을 얻는 과정에서 박정희만한 인물은 없었다. 특히, 그 시대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게 박정희는 여전히 ‘조국근대화의 영웅’이었다. 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자신들이 형식상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와 별 관련이 없는 박정희를 그토록 변호하려고 하는 데에는 이 같은 현실 정치의 맥락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을 쟁취해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박정희와 같은 ‘상징적’ 인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사실 박정희는 ‘기득권의 정치’에서 상징적인 인물이다. 박정희는 5·16 직후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에게 자신이 ‘군사혁명’을 일으킨 근본 동기가 당시 한국 사회에 만연된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함이라고 강변했지만(강상중·현무암 2012, 21), 사실 그의 시대는 한국에서 기득권 구조가 형

성된 시기였다. 송철원(2020)이 말했듯이, 한국 사회를 주물러 온 기득권 세력의 연원은 박정희였던 것이다. 실제로 박정희 정부 하의 한국은 자본가 계급의 ‘천국’이었는데(Koo 2001, 신광영 역 2002), 박정희 정권기 재벌들의 성장률이 전체 국민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양상을 보인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현대, 대우, 선정의 1971년부터 1975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57.9%, 105%, 그리고 67.7%에 이르렀다(구본호·김은미 2005, 197).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의 정치구조가 지배하는 미국 사회에서 기득권자들이 대중들을 어떻게 동원했는가는 해커와 피어슨(Hacker and Pierson 2016)이 말한 “미국의 기억상실(American amnesia)”이라는 정치 현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들이 말한 미국의 기억상실이란 가진 자들의 헤게모니 전략으로 말미암아 대중들이 한때 가졌던 효과적인 정부에 대한 믿음을 망각한 역설적인 현상을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들이 박정희라는 인물을 내세워 대중들을 그들의 논리에 동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박정희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이 신봉하는 이념 지향과 박정희가 모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마치 ‘주문’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되뇌고 있기 때문이다. 서두에서 말한 보수정당이 그들의 이념 지향과 관계없는 박정희의 사진을 회의실에 걸어놓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 정치의 맥락과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다.

## 2. 대항담론

오래전에 벨(Bell 1960)은 ‘이념의 종언(the end of ideology)’을 이야기한 바 있다. 산업사회의 유산인 이념이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후기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에 가서는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만일 그렇다면 벨이 말한 후기산업사회를 넘어 새로운 사회의 단

계를 이야기하는 현시점에서 미국 정치의 ‘양극화(polarization)’(Fiorina 2013)를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벨이 말한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념의 양극화를 촉진시켰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대중매체의 폭발적 증가가 ‘편향된 정보(niche information)’를 선별적으로 얻기 용이하게 만들어 이념 간 타협의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다이아몬드 2019, 432-434). 아마도 벨은 ‘유튜브’의 등장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 현대사는 이러한 이념 간 논쟁의 중심에 있다. 오래전부터 보수주의자들은 ‘커밍스와 그의 아이들(Cummings and his children)’이라고 불리는 좌파 수정주의자들이 한국 현대사를 정치 투쟁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주의자들이 봤을 때 한국 현대사는 수정주의자들에 의해 뒤틀린 ‘왜곡의 역사’에 다름 아니었는데, 다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인용문은 그들이 한국 현대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980년대 이후 한국 현대사 연구는 커다란 전환을 보였다. 이 무렵 ‘커밍스와 그의 아이들(Cummings and his children)’을 중심으로 분단과 한국전쟁의 기원을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가 붐을 이루었다. ... 수정주의자들과 386세대는 한국 현대사 전체를 그들의 눈으로 재해석하려고 들었다. 그들에게 한국 현대사는 반민중, 반민족, 반민주의 역사로서 오욕의 역사이고, 지우고 싶은 대상이며 다시 쓰고 싶은 대상이었다(김일영 2005, 10-11).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보수주의 역사학자들은 수정주의자들이 왜곡한 한국 현대사를 다시 제 위치에 돌려놓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이 수정주의자들이 쓴 『해방전후사의 인식』에 대항하여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1권과 2권을 내놓은 것은 그 같은 노력의 첫 번째 결실이었다. 물론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이들의 노력은 정치권력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계속되었다. 이

명박 정부 때 ‘건국절 논쟁’이나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논쟁’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정교과서의 경우, 이들이 ‘대안교과서’를 낼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부분인데,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에게 좌파의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들에게 있어 한국 현대사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위대한 역사였다.

특히, 박정희는 국정교과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새로 나오게 될 국정교과서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만든 ‘효도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sup>6)</sup> 사실이 어떻든 간에 모양새는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다. 이전부터 박정희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박정희 정권기 이룩한 ‘기적적인’ 경제 성장이 진보 세력에 의해 심각하게 폄하되어 왔다는 불만을 공공연하게 표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봤을 때 현 정권을 포함한 진보 세력은 한 보수 인사가 말했듯이, “당신께서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반동세력에 다름 아니었다.<sup>7)</sup>

그 결과 보수주의자들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이른바 ‘기획서’에서 박정희는 ‘조국근대화의 영웅’이라는 박제화된 이미지로 형상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박정희를 ‘추악한 독재자’로 묘사한 좌파에 대한 대항담론이자 좌파와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상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현실 정치에서 거의 의미가 없었던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켜세우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현실 정치에서 헤게모니를 얻기 위한 단순한 동기만으로는 보수주의자들의 역사관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도 바로

6)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국정교과서에 반대했고, 집권하자마자 국정교과서 제도를 폐지하였다.

7) 이 말을 한 사람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였는데, 그는 201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자 저의 동년배인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혁명 구호 아래 마녀사냥으로 탄핵되고 구속”되었다며, “당신의 따님, 우리가 구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손덕호 2019).

여기에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이 한국 현대사를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묘사했다고 인식하는 것은 피상적인 이해이다. 사실 이들이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좌파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좌파들이 한국 현대사를 ‘정의가 실패한 역사’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로서 한국 현대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뿐, 이들의 역사 서술에서 일관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된 책 『반일 종족주의』에서 이영훈(2019)이 대한민국을 가리켜 “거짓말의 나라”라고 단언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국민, 정치, 학문, 재판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거짓말이 판을 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도입부부터 ‘통계수치’까지 인용하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일삼는 민족인지 애써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014년에만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1,400명입니다. 일본에 비해 172배라고 합니다. 인구수를 감안한 1인당 위증죄는 일본의 430배나 됩니다.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고소, 곧 무고 건수는 500배라고 합니다. 1인당으로 치면 일본의 1,250배입니다. 보험사기가 만연해 있음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2014년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의료보험 등 보험사기의 총액은 4조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느 경제신문은 미국의 100배라고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금도 사기에 의해 줄줄 새고 있습니다. 2018년의 국정감사 때 밝혀진 일입니다만,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33%가 사기에 의한 지급이었습니다(이영훈 2019, 10-11).

한강의 기적을 이룬 ‘위대한 민족’이 어느샌가 거짓말이나 일삼는 ‘하등 민족’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중적 민족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 민족성 역시 좌·우의 진영 논리에 좌우되는 ‘이념적 구성물(ideological constructs)’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은, 제섭(Jessop 1982)이 ‘이국민(two nation) 헤게모니’에서 말한 것처럼 ‘포용’의 대상이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배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존재였다.

요컨대 보수주의자들이 이승만과 박정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은 그들이 보수주의자들의 이념 지향과 맞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한국 보수 세력의 ‘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보수주의자들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추앙하는 것은 이들이 야말로 좌파들의 집중 공격을 받는 논쟁적인 인물이며, 따라서 좌파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수주의자들이 ‘자백사관’과 ‘자학사관’ 사이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시장경제를 존중한다면 ‘관치경제’의 대명사인 박정희를 정치적 기원으로 삼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3. 그들만의 대한민국

박정희를 기원으로 삼은 이상, 보수주의자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충만한 ‘관념적인 우파의 나라’가 아니라, 철 지난 냉전논리가 지배하는 ‘반공국가’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박정희식 반공국가의 전체주의적 속성이 그들의 이념 지향과 모순되는지 여부, 또는 보다 근본적으로 박정희를 그들이 원하는 ‘반공투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의 이념 지평에서 박정희는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표리부동(表裏不同)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시험에 직면해서는 자신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대통령의 탄핵까지 불러온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은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커밍아웃’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서도 나와 있듯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보수 세력들의 이념 지향에 따르면 박근혜는 한국 보수 세력의 ‘적’으로서 마땅히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문제를 좌우의 이념 대결로 몰아가면서, 소수의 불순분자들—흔히 하는 말로 ‘빨갱이들’—로부터 박근혜를 지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그들에게 있어 박근혜는 소수 불순분자들이 선동한 중우정치의 ‘희생양’일 뿐이다.

보수주의자들의 이념 지향과는 상반된 모습이었지만, 한국 보수 세력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명백한 모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들을 지금껏 먹여 살린 것은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가 아니라 철 지난 냉전논리가 만든 이른바 ‘빨갱이 담론’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별 생각 없이 ‘보수주의’라고 했던 것도 실상은 박정희 정권기에 만들어놓은 조악한 흑백논리, 다시 말해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곧 빨갱이들의 준동이라는 사고에 기인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한 보수 논객이 촛불집회에 대하여 만들어진 태극기집회를 가리켜 세계최대의 ‘반공집회’라고 평했던 것은 그 같은 사고의 산물이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 박정희-박근혜로 이어지는 구체제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빨갱이’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40년 전에 죽은 독재자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은 그들이 현재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그들이 봤을 때 현재의 대한민국은 좌파들이 득세하는 혼돈의 세상일 뿐이다. 보수주의자들이 박정희라는 ‘과거’를 통해 좌파가 지배하는 ‘현재’를 바꾸려고 하는 ‘역사전쟁’에 몰입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역사전쟁은 필연적으로 편향성을 띠 수밖에 없다. 역사학자 홉스봄(Hobsbawm 1997, 강성호 역 2002)이 역사학의 독소로 규정한 ‘역사회고주의’, 다시 말해 불만족스러운 현재

를 재건하기 위해 과거를 ‘좋았던 시절’로 규정하는 오류를 한국의 보수주의자들도 범하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홉스봄도 말했듯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도 않은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러한 사례(과거가 현재의 권위가 되는 사례: 필자 추가)는 우리를 역사가 지닌 다른 기능으로 이끌어간다. 현재는 어떤 의미에서 불만족스럽다면, 과거는 만족스러운 형태로 현재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나간 시대는 좋았던 시대로 규정되었고 사회가 되돌아가야 할 곳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여전히 살아 있다. … 과거로의 복귀는 너무 오래되어 재건되어야 할 것으로의 복귀, 즉 15~16세기의 지식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오랜 망각 후에 진행된 고전 고대의 ‘재탄생’ 혹은 ‘부흥’이거나,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목적을 위해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의 복귀이다. … 그것은 복고인 체하는 혁명적 혁신이어야 했다. 실제로 그것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주장하는 역사를 꾸며내야만 했다(홉스봄 2002, 55-56).

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들이 그토록 ‘반공’에 집착하는 이유 역시 역사 회고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매카시즘의 광풍이 부는 시기가 그들에게는 ‘황금기’였다는 의미이다. 기득권과 반공 논리가 결합한 데에는 식민 지배라는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 결부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기득권 세력이 되었던 친일파들은 ‘제국주의의 주구’라는 자신들의 원죄를 숨기기 위해 ‘반공 투사’로 변모했다(송철원 2020). 이들의 전략적 태도 변화는 냉전 논리에 사로잡혀 있던 미국과 이승만 정권의 지지를 받았고, 기층 대중의 여론과는 상관 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들에게 있어 반공은 곧 기득권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들의



논리는 박정희의 반공 이데올로기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박정희는 과거 자신의 좌익 경력으로 인해 1963년 대선에서 큰 곤욕을 치른 바 있었지만,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는 권력 유지를 위해 용공몰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용공몰이에만 몰두하던 이승만 정권과는 달리, 박정희 정권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개발 이데올로기와 결부시킴으로써, 반공은 기득권자들만의 논리가 아닌 기층 대중의 보편적 이데올로기, 다시 말해 헤게모니가 될 수 있었다. 경제 개발은 곧 국방을 의미하고 국방은 곧 경제 개발을 의미한다는 보수주의자들의 논리가 완성된 것이다(김정렴 2006; 김형아 2005; 오원철 2006).

그 과정에서 경제력의 집중과 권위주의 통치라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었지만, 박정희는 이를 개의치 않았다. 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보수주의자들 역시 박정희의 주장에 공명하면서, 박정희와 김일성의 ‘인생 대차대조표’를 비교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박정희와 김일성 모두 독재를 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박정희는 역사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이다(김용삼 2017).<sup>8)</sup> 정광민(2020)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남북한 체제 경쟁의 최대 수혜자는 박정희와 김일성이었지만, 이들의 독재는 대중들의 지지도 이끌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 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대중들의 정치적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으며, 지금의 보수주의자들 역시 ‘사회주의’와의 역사전쟁에서의 승리를 박정희의 주된 업적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김은구 2018). 이 점에서 보수주의자들의 논리는 기층 대중의 논리와 접점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접점은 하나의 인과 경로를 숨김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반공이 경제 개발을 가져왔다는 보편적인 인과 경로 외에, 경제 개발이 기득권의 유지로 이어졌다는 숨겨진 인과 경로 말이다.

---

8) 그런데 김용삼은 박정희 시대 남북한의 통계수치가 아닌 박정희가 죽고 한참이 지난 2014년의 통계수치를 근거로 비교하였다. 이러한 서술 태도는 비단 김용삼의 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보수주의자들의 저술에서도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인데,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박정희의 공이라는 보수주의자들의 역사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 V. 결론

혹자는 박정희 시대의 종언을 이야기한다. 박정희의 후광효과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가 탄핵된 시점에서 박정희는 더 이상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역사적으로 죽은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만일 그렇다면 현실정치에 깊숙이 몸담고 있는 거대 야당의 회의실에 박정희의 사진을 걸어놓고 있을 이유가 없으며, 보수 논객들이 끊임없이 박정희를 거론할 이유도 없다. 그들에게 있어 박정희는 역사적으로 살아있는 인물이며, 진행형의 정치에서 조국근대화의 영웅이자 부국의 정치 지도자인 것이다.<sup>9)</sup>

보수주의자들에게 박정희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자신들의 이념 체계와 맞기 때문은 아니다.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박정희는 ‘자유민주주의자’도 아니고 ‘시장주의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박정희를 정치적 기원으로 삼아 지지하는 이유는, 박정희의 대중적 인기로 편승한 현실 정치의 맥락이거나 과거 기득권에 대한 향수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40년 전에 죽은 독재자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된다.

보수주의자들은 ‘좋았던 과거’ 또는 홉스봄이 말한 ‘존재하지도 않은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선별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즉, 그 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이 아닌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보는 ‘우파적 프레이밍’에 갇혀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 정치의 맥락과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다. 보수주의자들이 박정희를 둘러싸고 그들이 말하는 ‘좌파’와 역사 전쟁을 벌이는 것은, 박정희라는 인물을 내세워 현실 정치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치열하게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자’ 및 ‘시장주의자’로 변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박정희의 본 모습은 사라지고

9) 최근에 실시한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에서도 박정희는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는 31%의 호감도를 얻어 3년 연속 1위에 올랐으며, 노무현(22%), 문재인(21%), 김대중(8%),李明박(6%), 김영삼·박근혜(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정찬 2021).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들이 봉변을 감수하면서까지 박정희의 생가를 방문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의 관념화된 이미지만 남게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주의자들은 ‘좌파들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우파들의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들이 ‘제2의 박정희’ 운운하는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이주천 2018),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그들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박정희 향수가 들불처럼 번져 그의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것이 우파들의 위기로 이어질 것을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박근혜가 탄핵된 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들의 자조(自嘲)는 절박한 현실 인식을 담고 있다.<sup>10)</sup>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했고, 보수주의자들은 그러한 상징으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선택했다. 그들이 이 두 사람을 변호하는데 그토록 열을 올린 것은 이 같은 정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현실은 녹록치 않다. 아버지 박정희의 후광효과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가 탄핵되고 난 후, 박정희가 지금 시점에 필요한 정치 지도자라는 생각은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여전히 대중적인 인물이고, 그 시대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조국근대화의 영웅’으로 비춰지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보수주의자들의 바람이 전혀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상(空想)’만은 아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법이다. 만일 헬조선이나 수저계급론과 같은 우리 시대 어두운 담론이 계속 지배한다면, 실제적이든 관념적이든 ‘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가 일어 제2, 제3의 박정희가 출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이후 보수주의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이는 사실 과장된 면이 있다. 한국은 남북분단이라는 상황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우경화’가 심한 나라다. 실제로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이 집권을 하는 데에는 보수 성향 인사들과의 ‘어색한 동거’(김대중, 노무현)나 보수 정권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극적인 사건’(문재인)이 필요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이후 잇따른 선거 승리로 우쭐해진 여권 내부에서는 ‘20년 집권’이라는 장기적인 플랜을 공공연히 말했지만, 정작 다음 대선의 승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7 재보선’의 결과는 한국 이념 정치의 일반적 경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

## 참고문헌

- 강상중·현무암. 2012.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에게 만주국이란 무엇이었는가』. 서울: 도서출판 책과 함께.
- 구분호·김은미. 2005. “경제발전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 조이제카터 에커트(공편). 『한국 근대화, 기적의 과정』, 183-205. 서울: 월간조선사.
- 김광동. 2017. “20년 만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대한민국.” 이영훈 외 『박정희 새로 보기: 오늘에 되살릴 7가지 성공모델』, 37-63.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 김광모. 2015. 『중화학공업에 박정희의 혼이 살아 있다』.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 김영명. 2013. 『대한민국 정치사: 민주주의의 도입, 좌절, 부활』. 서울: 일조각.
- 김용삼. 2017. “박정희 대 김일성, 인생 대차대조표로 본 남북의 현재.” 이영훈 외 『박정희 새로 보기: 오늘에 되살릴 7가지 성공모델』, 107-147.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 김은구. 2018. “사회주의와의 전쟁에서 역사적 승리를 기록할 나라.”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편). 『박정희, 그리고 사람: 대한민국을 사랑한 대통령』, 58-64. 서울: 미래사.
- 김인영. 1998a. “한국경제성장과 삼성의 자본축적.” 『한국정치학회보』. 32권 1호, 111-131.
- \_\_\_\_\_. 1998b. 『한국의 경제성장: 국가주도론과 기업주도론』. 서울: 자유기업센터.
- \_\_\_\_\_. 2017. “박정희가 정경유착을 했다고? 내가 하면 네트워크, 남이 하면 유착?” 송복 외 『박정희 바로 보기: 우리가 알아야 할 9가지 진실』, 37-66.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 김일영. 2005. 『건국과 부국: 현대한국정치사상의』. 서울: 생각의 나무.
- 김정렴. 2006.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한국 경제정책 30년사』. 서울: 랜덤하우스 중앙.
- 김형아. 2005. 『유신과 중화학공업: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서울: 일조각.
- 김호진. 2006. 『대통령과 리더십』. 서울: 청림출판.
- 남정욱. 2017. “박정희가 만들고 싶었던 세상: 『우리 민족의 나갈 길』과 『국가와

- 혁명과나.」 이영훈 외 『박정희 새로 보기: 오늘에 되살릴 7가지 성공모델』, 65-105.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 류석춘. 2017. “박정희가 노동자를 착취했다고? 중산층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송 복 외 『박정희 바로 보기: 우리가 알아야 할 9가지 진실』, 163-185.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 \_\_\_\_\_. 2018.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했는가: 대한민국 기능공의 탄생과 노동귀족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 박명립. 2006. “한국 현대사와 박정희·박정희 시대: 통치철학과 사상, 국가전략, 그리고 민주주의 문제.” 정성화(편). 『박정희 시대와 한국 현대사』, 31-79. 서울: 도서출판 선인.
- 박정희. 2017a[1961]. 『지도자도』.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 \_\_\_\_\_. 2017b[1962]. 『우리 민족의 나갈 길』.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 \_\_\_\_\_. 2017c[1963]. 『국가와 혁명과 나』.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 손덕호. 2019. “박정희 前 대통령 서거 40주기 추도식 ... 국립현충원서 열려.” 『조선일보』 (10월 26일).
- 송철원. 2020. 『박정희 쿠데타 개론』. 서울: 현대사기록연구원.
- 엠스텐, 앨리스. 2005. “위대한 인물, 그리고 한국의 공업화.” 조이제·카터 에커트 (공편). 『한국 근대화, 기적의 과정』, 367-393. 서울: 월간조선사.
- 여명. 2017. “박정희가 원조 친일파라고? 그렇다면 인도의 간디는 민족반역자.” 송 복 외 『박정희 바로 보기: 우리가 알아야 할 9가지 진실』, 67-87.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 오원철. 2006.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서울: 동서문화사.
- 왕혜숙. 2017. “한·일 국교정상화가 매국이라고? 뭘 모르고 하는 그런 비판이 친일매국.” 송 복외 『박정희 바로 보기: 우리가 알아야 할 9가지 진실』, 287-327.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 윤주진. 2017.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 돕는다: 자발성과 경쟁심리의 공학적 결합, 새마을운동.” 이영훈 외 『박정희 새로 보기: 오늘에 되살릴 7가지 성공모델』, 237-267.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 이강호. 2019. 『박정희가 옳았다: 5·16과 10월유신의 정치경제학』.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 이기흥. 1999. 『경제근대화의 숨은 이야기: 국가장기경제개발 입안자의 회고록』. 서울: 보이시스.
- 이도성(편). 1995. 『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 서울: 한승.
- 이동원. 1992. 『대통령을 그리며』. 서울: 고려원.
- 이영훈. 2017. “박정희 모델의 재평가와 그 개량적 복구의 필요성.” 이영훈 외 『박정희 새로 보기: 오늘에 되살릴 7가지 성공모델』, 11-35.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 \_\_\_\_\_. 2019. “프롤로그-거짓말의 나라.” 이영훈 외. 『반일종족주의: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 10-21. 서울: 미래사.
- 이주천. 2018. “‘제2의 박정희’ 등장은 가능할까?”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편). 『박정희, 그리고 사람: 대한민국을 사랑한 대통령』, 182-190. 서울: 미래사.
- 임혁백. 2004. “유신의 역사적 기원: 박정희의 마키아벨리적인 시간(上).” 『한국정치연구』. 13권 2호, 223-258.
- \_\_\_\_\_. 2005. “유신의 역사적 기원: 박정희의 마키아벨리적인 시간(下).” 『한국정치연구』. 14권 1호, 115-146.
- \_\_\_\_\_. 2014. 『비동시성의 동시성: 한국 근대정치의 다중적 시간』.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문 화원.
- 전인권. 2006. 『박정희 평전: 박정희의 정치사상과 행동에 관한 전기적 연구』. 서울: 이학사.
- 정광민. 2020. 『김일성과 박정희의 경제전쟁』. 부산: 도서출판 산지니.
- 정찬. 2021. “[리서치뷰]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박정희 31%-노무현 22%-문재인 21%’.” 『폴리뉴스』 (1월 2일).
- 조갑제. 2009. 『박정희의 결정적 순간들: 62년 생애의 62개 장면』.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서울: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 좌승희. 2015. 『박정희 살아있는 경제학』. 경기: 도서출판 백년동안.
- \_\_\_\_\_. 2018.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 현진권. 2018. “정부 주도로 시장경제를 만든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편). 『박정희, 그리고 사람: 대한민국을 사랑한 대통령』, 104-112. 서울: 미래사.
- Alavi, Hamza. 1983. “The State in Post-Colonial Societies: Pakistan and Bangladesh.” In Harry Goulbourne(ed.). *Politics and State in the Third World*. London: Macmillan.
- Bell, Daniel. 1960. *The End of Ideology: The Exhaustion of Political Ideas in the Fifties*. Glencoe, Illinois: Free Press.
- Benedict, Ruth F. 저. 김윤식·오인석 공역. 2008. 『국화와 칼: 일본 문화의 틀』. 서울: 을유문화사.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Boston, Mass. Houghton Mifflin Harcourt. 1946.
- Carr, Edward H. 저 김택현 역. 2015. 『역사란 무엇인가』. 제2판. 서울: 까치글방. *What is History?* 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Diamond, Jared. 저. 강주현 역. 2019.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경기: 김영사. *Upheaval: Turning Points for Nations in Crisi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2019.
- Fiorina, Morris P. 2013. “America’s Polarized Politics: Causes and Solutions.” *Perspectives on Politics*. 11(3): 852-859.
- Gramsci, Antonio. 저. 이상훈 역. 2006. 『그람시의 옥중수고 1, 2』. 전북: 거름.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1.
- Hacker, Jacob S. and Paul Pierson. 2016. *American Amnesia: How the War on Government Led Us to Forget What Made America Prosper*. New York: Simon & Schuster.
- Harari, Yuval Noah 저. 조현욱 역. 2015. 『사피엔스』. 경기: 김영사.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 New York: Harper. 2014.
- Henry, Todd A. 저. 김백영 외 공역. 2020. 『서울, 권력 도시: 일본 식민 지배와 공공

- 공간의 생활 정치』, 서울: 도서출판 산처럼. *Assimilating Seoul: Japanese Rule and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in Colonial Korea, 1910-1945*.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4.
- Hobsbawm, Eric. J. 저. 강성호 역. 2002. 『역사론』, 서울: 민음사. *On History*. New York: The New Press. 1997.
- Jessop, Bob. 1982. *The Capitalists State: Marxist Theories and Metho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Kang, David C. 2006. “Bureaucracy, 1948~1979.” In 정성화 편. 『박정희 시대와 한국 현대사』, 81-139. 서울: 도서출판 선인.
- Koo, Hagen 저. 신광영 역. 2002.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서울: 창작과 비평사. *Korean Workers: The Culture and Politics of Class Form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 Markovits, Daniel 저. 서정아 역. 2020. 『엘리트 세습: 중산층 해체와 파멸을 가속하는 능력 위 주 사회의 함정』, 서울: 세종서적. *The Meritocracy Trap: How America's Foundational Myth Feeds Inequality, Dismantles the Middle Class, and Devours the Elite*. Penguin Press. 2019.
- Moore Jr., Barrington. 1966.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Beacon Press.
- Pontusson, Jonas. 2005. *Inequality and Prosperity: Social Europe vs. Liberal Americ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Stone, Deborah A. 2012. *Policy Paradox: The Art of Political Decision Making*. Third Edition.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Company.
- Swanstrom, Todd. 1988. “Semisovereign Cities: The Politics of Urban Development.” *Polity*. 21(1): 83-110.

투고일: 2021.10.15.	심사일: 2021.11.25.	게재확정일: 2021.11.26.
------------------	------------------	--------------------



## How is Park Chung-hee Embodied in Conservative Writings? : Political Dynamics of Contradictory Framing and Park Chung-hee

Koo, Hyunwoo |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olitical origin of conservatism in Korea is contradictory. This is because it is based on Rhee Syng-man and Park Chung-hee, who have little to do with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pursued by conservatives, are their origin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Park Chung-hee, this contradiction is bound to be even more severe. and in this context conservatives are making great efforts to incorporate Park Chung-hee into their ideological system. Park Chung-hee motivated economic actors through market mechanisms such as ‘selective incentives’, and enabled today’s liberal democracy by practicing the politics of ‘pragmatism’. However, conservatives’ efforts to incorporate Park Chung-hee into their ideological system inevitably go through the process of ‘framing’. Rather than an overall analysis of the history of the period, they are making the mistake of selective viewing only the areas in their favor. As a result, conservatives' efforts create another contradiction. As long as Park Chung-hee is a political origin, the Republic of Korea they dream of is not ‘a country of ideological right’ full of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but ‘an anti-communist country’ dominated by outdated Cold War logic.

---

**Key Words** | Park Chung-hee, Conservatism, Framing, Political Leader in the Wealthy Nation